

# “내란 혐의자에 대한 기준 제시… 역사 정의 실현”

##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반응

광주 시민사회 “내란 공범 인정한 판결…환영”  
일부 단체 “2·3심 감형, 정치적 사면 절대 안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시민사회의 평가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노동계는 “내란 공범에게 당연한 선고”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종우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점은

행사에 대해 통제·견제할 책임이 있었다”며 “12·3 계엄과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확고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12·3 내란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며 “판결이 향후 관련자 재판에서도 타협 없는 무관용의 기준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뿐만 아니라 세력이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동위원장도 “한 전 총리는 당시 국무총리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

을 일삼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의결 정족수를 가능하게끔 역할을 했다”며 “전두환·노태우씨 선고 사례처럼 사형, 무기징역 선고를 통해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재판부가 사인의 양증합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판결을 내렸지만 내란에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형벌이 내려져야 했다”며 “2~3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 안 되고, 정치적 사면 역시 절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승태영 기자 st123@



고니 가족의 휴식 21일 영산강 상류지역인 광주 북구 신용동 일대에서 한 무리의 고니(천연기념물 201호) 가족이 강 위에서 유유히 이동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멸종위기 아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고니는 순수 우리말이며, 백조라 불리기도 한다. 11월 말 러시아 캄차카에서 날아와 지나다 3월 중순에 다시 돌아간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염전업자 울린 ‘전과 23범’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 순천시민연대 “반도체 국가산단 순천 지정해야”

### “광양만권 산업구조 전환 실질적 해법” 강조

약 7000포대의 소금 판매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전과 23범이 또다시 교도소를 가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업자들을 속여 20kg 들이 소금 6900여포대를 기로채는 등 각 종 사기로 5억4900만원을 받아 쟁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자들에게 소금을 납품하면 한 달 내로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대금을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순천시민연대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지지하며 RE100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순천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시민연대는 21일 오전 10시 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통합의 실질적 성과로 순천이 RE100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300명은 반도체 산업이 막대한 전력 수요와 안정적인 용수 공급, 전문 인력이 장기간 정주할 수 있는 도시 여건을 동시에 요구하는 국가 핵심

와 산업 확장이 가능한 부지 확보 여건 등도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순천시민연대는 “RE100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순천 유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성과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업이다. 대한민국 산업의 균형 성장을 이끄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철강·화학 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광양만권 산업구조 전환의 실질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향후에도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의 전반에 시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 표명과 공론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 피부미용업 위장 신·변종 성매매 업소 적발

### 광산경찰, 업주 등 6명 입건

남성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분 인증 절차를 거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광산구 일대에서 건전마사지를 빙자한 대형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入手해

광주광산경찰은 21일 아파트 밀집 지역 상가에서 피부미용업으로 위장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 A씨와 20대 실장 B씨, 여종업원 4명 등 6명을 불구속 입

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외형상 피부미용·건전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뒤 사무실 내부에 침대와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예약제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성인정보 사이트에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로 광고를 게시하고 여종업원 사진과 프로필, 업소 연락처 등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를 날 세벽까지 광주 남구 일대 교회와 주택가, 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4대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 가운데 2대는 불이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나, 나머지 2대는 각각 시가 500만원과 1813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돼.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2월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고문의 062)370-7070  
구독문의 062)370-7080

## 뉴스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광남일보를 구독해 주세요

